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협력 마중물’ 경기도 주도적 역할 찾기 계속될 것

이재강 道 평화부지사 ‘도라산 집무실 휴하라’ 1인시위 16일째

“美 대선 영향으로 한반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한 현장집무실 설치도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 중 하나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민통선 도라전망대 내 집무실 설치가 유엔(UN)사령부의 불허 방침에 막히면서 지난 10일부터 한파를 뚫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강<사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물꼬를 트기 위한 마중물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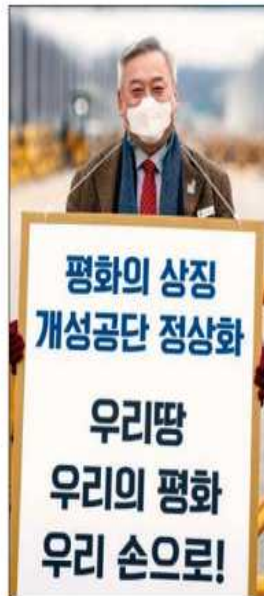
이 평화부지사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에 합의했다”며 “남북 모두 개성공단 재개동이 남북 경제 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부지사와 도는 당초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한 도라산

도 ‘재개 선언’ 위한 집무실 설치 유엔사 개입으로 좌절 납득 못해 임진각서 업무 각계 지지 이어져 코로나 이후 남북 보건협력 우선

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유엔사에 막혔다. 도는 군에서 도라전망대에 집무실 설치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지만 갑자기 유엔사의 승인이 없어 집무실 설치가 어렵다는 통보가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부지사는 “국방부는 ‘정전협정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사령부의 승인 없는 대한민국 지자체인 경기도가 군사적 목적이 아닌 행정행위를 위한 사무실 집기도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불공정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격려 차원의 방문을 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분단의 현장 바로 앞에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나니 업무에 대한 현장감이 높아지고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도 한층 더 실감한다”며 “다양한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향후 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건 협력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의료 협력, 감염병·가축전염병, 접경지역재해·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 모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통한 남북 협의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그는 “코로나19 이후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내놴. 임하연 기자 lhy@khihoilbo.co.kr

이 부지사는 유엔사의 부당한 승인권 행사를 규탄하면서 파주 임진각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 부지사의 현장집무실에는 김원웅 광복회장과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인 등이 부지사의 뜻에 동조하는 많은 이들이

한겨레

“임진각에 천막 집무실 차리고 16일째 나홀로 출근하는 이유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인 시위 남북정상'에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 유엔사 '도라전망대 집무실' 승인 거부 통일대교 앞에서 '유엔사 규탄' 나서

이재강(사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남·북 정상에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며 16일째 파주시 임진각관광지 안 '바람의 언덕'에 세운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애초 개성공단이 바라다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사령부가 승인해주지 않아 지난 10일 임진각에 임시 집무실을 내고 인근 통일대교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유엔사를 규탄하는 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



지난 23일 오후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옆 언덕 위 몽골식 텐트 집무실에서 만난 이 부지사는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개성공단 재개선언”이라며 “(그 뒤에) 제재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남북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평화협력 기회를 놓

쳤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이제는 ‘복미의 시간’이 아닌 ‘남북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듯이, 지금이야말로 남북 지도자들이 만나 머리 맞대고 자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 촉구에 경기도가 나선 이유는 뭘까. 부지사는 “공단 폐쇄조치가 내려진 지 4년10개월이 지나고 있어 더 이상 입주 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시 120여개 기업 중 40여개가 경기도 업체로 개성공단 중단으로 가장 피해가 큰 지방정부가 바로 경기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남북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라며 “경기도 평화정책을 맡고 있는 부지사로서 (천막 집무실 출근이) 보여주기식 쇼로 보이는 것이 두

려워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문을 연 뒤 2016년 폐쇄될 때까지 누적 생산액이 약 3조8천억원(32억달러)에 이르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험장이었으며, 남과 북 노동자 5만5천여명이 함께 근무한 작은 통일이 날마다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현지 부지사 신분으로 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애초 시위할 계획이 없었고, 특정 기관이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시위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에 출입하는데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의 사례이며, 이런 불공정을 타파하자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내고자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 마중물 구실을 하는 것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역할”이라며 “개성공단 재개선언이 이뤄지는 날까지 임진각과 도라전망대에서 평화부지사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진각/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